

# 시루봉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회원소식지

2008

6



442-420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22-5(2층) <http://www.minjumedial.or.kr>

☎ 031-244-7632 fax 031-244-7639 [minjumedial@hanmail.net](mailto:minjumedial@hanmail.net)

## 촛불과 민주주의

먼저 머리 숙여 사과부터 드려야겠습니다.

경기민언련 회원소식지 <시루봉>이 지난 3월 이후에 발행되지 못했습니다. 열악한 사무처의 조건과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정세적 상황 때문에 그랬다고 하기에는 너무 긴 시간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달 가까이 촛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물론이고 이곳 수원에서도 매주 수요일이면 어김없이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계십니다. 광우병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기 싫다고 청소년들이 촛불을 든 이후 날이면 날마다 서울 시청앞 광장은 촛불의 일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광우병 문제는 ‘민주주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낯선 방패와 곤봉으로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체포해도 촛불은 사그러 들기는 커녕 나날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언론 역시 시민들의 광고주 압박에 지면이 줄어드는 등 역사상 유래없는 안티 조중동 세력을 만났습니다.

‘조·중·동은 쓰레기’라는 구호가 이제는 실제 조선일보 건물 앞에 쓰레기를 갖다 놓는 시민들의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중동은 연일 ‘폭력시위’의 딱지를 갖다 붙이고 공권력의 강력한 대처만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는 꼴을 보자니 이제는 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시민들은 변했습니다. 두 달 사이에 참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그 변화의 한복판에 서있는 경기민언련 역시나 환골탈퇴의 심정으로 더욱 시민들과 함께 언론개혁과 미디어운동의 저변을 확산시키는데 노력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비판과 격려가 다시한번 필요한 때입니다.

# 촛불은 없고 결과만 난무하는 지역언론

이주현 | 공동대표

이명박 정부 100일을 맞이하여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실용이라는 가치를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정말 컸습니다. 그 기대가 바로 530만 표 차이라는 압도적 지지를 통한 당선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 현재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선 취임 초 70% 가까운 지지율이 현재는 취임 100일 만에 2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어떤 매체에서는 17%대의 지지율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처음 있는 일이며,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현상입니다.



경기 지역 언론에서도 취임 100일을 맞이한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쓴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MB 취임 100일, 축배대신 반성문”, “쇠고기 재협상부터..국정쇄신 서둘러야” 등이 주요 타이틀 이었습니다. 지역언론들의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대는 대단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한 “수도권 규제 해소”와 “균형발전에 대한 재검토” 등이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규제 해소에 대한 기대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는 자취를 감추

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규제 해소와 개발 욕구에 대한 기대 심리를 전반적인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국민적인 신뢰를 잃은 정부의 정책은 추진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지율 하락과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현상은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과 정부와 청와대 각료 인선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만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 5월 초, 서울 청계광장에서 중고생들이 중심이 되어 열린, 촛불시위라는 데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습니

다. 지난 4월 중순, 이명박 대통령 미국 순방 중 체결된 “미국 소고기 협상”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중고생들의 촛불시위로 촉발된 것입니다.

이 촛불 시위는 건잡을 수없이 타올라 현재는 27회를 맞이하게 되었고, 전국의 주요도시를 비롯하여 중소도시에서도 볼 수 있는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영어 몰입교육과 경부대운하, 학교자율화조치, 공공부문의 민영화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미국 소고기 협상 체결과 정부의 고시 강행”을 계기로 국민적인 분노가 폭발한 셈입니다. 이러한 촛불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을 20% 내외로 주저 앉혔을 뿐 아니라, 요지부동이던 미 정부와 축산업자들을 움직여, 소고기 월령표시와 검역주권에 대한 양보를 얻어 내기도 했습니다. 재협상에 대하여 난색을 표시하던 한나라당은 야 3당과 공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소고기 정국을 이끈 것은 시민들의 촛불이었습니다만, 정작 경기지역 언론에서는 촛불은 없었습니다. 미국 소고기 전면 개방으로 인한 국내 축산업자와 농가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보도했지만, 소고기 전면 개방으로 인한 광우병 공포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거나 아예 다루질 않았습니다. 네티즌들의 문제 제기에 대하여 “광우병 괴담”이라는 정부 측의 주장을 그대로 담아내기에 바빴습니다. 일부 지역 내 촛불시위에 대한 보도가 있었지만 정국을 파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지면이었고 이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습니다.

이번 촛불문화제로 나타난 시민들의 촛불시위는 여러 가지 면에서 기존의 시위문화와 다른 특이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 2.0세대의 등장이 단연 돋보입니다. 이들은 기성세대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 이른바 조·중·동으로 부터 완벽하게 분리된 독자적인 미디어체제를 가진 세대였습니다.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소통구조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문제제기를 하면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동력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이번 촛불시위는 이들이 주도했습니다. 기성 언론에 대한 강한 불신이 드러난 셈입니다.

언론의 생명은 신뢰입니다. 촛불은 보이지 않고 촛불로 인한 파동과 결과만 난무하는 언론의 모습은 독자들이나 시청자들로부터 불신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자나 시청자와 함께 호흡하는 언론을 기대해봅니다.

**<경기방송, KFM 99.9 옴부즈맨라디오, 6/8 오전 8시30분 방송분>**

A young child with dark hair is looking down at a glowing white cup. The child's face is partially obscured by shadows, and the cup is the primary light source in the scene. The background is a soft, out-of-focus grey.

특집\_

# 촛불과 미디어

# ‘촛불’은 전자직접민주주의 실천 현장

고승우 | 미디어 오늘 논설실장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가 발표된 20일 벌어진 촛불 축제와 시위는 장대 빗속에서도 활활 타올랐다. 그것은 수구언론이 입을 모아 되뇌던 ‘촛불이 꺼지고 있다’는 주문을 잠재웠다. ‘촛불’의 건재는 우리 사회에 전자직접민주주의(electronic direct democracy ; EDD)가 세계 최초, 최대 규모로 실천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전자직접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민주적 절차의 수위를 높이는 인터넷, 휴대폰과 같은 전자 통신 기술의 발달과 대중화로 가능케 된 최첨단 민주주의 형태다.



촛불 시민들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와 그 의미를 인터넷 등을 통해 즉각 파악하고 대규모 심야 시위에 동참했다. 시위 참가 시민들은 휴대폰을 통해 시위전개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대처하면서 비폭력 분위기를 유지하고 ‘방화’와 같은 돌출 행동을 저지했다.

전자직접민주주의는 엘빈토플러와 같은 미래학자들이 제시한 정보화 사회의 디지털 민주주의인데 아직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이처럼 구체적으로 실체를 드러낸 곳은 없다.

인터넷은 동시에 다수가 저비용으로 정보교환이 가능한 잇점이 있는 반면 라디오와 TV 등은 소수의 정보 공급자가 다수에게 전달하는 아날로그 형식을 벗어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강의 정보선진국으로 발돋움함으로써 전자직접민주주의가 원동력이 된 촛불의 등장을 가능케 한 것이다.

전자직접민주주의의 중요한 부분인 직접민주주의는 인터넷 등의 정보기기를 이용해 시민들이 직접 정치 과정에 참여해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국회의원 등을 뽑아 실시하는 대의민주주의와 다르다. 직접민주주의는 국민투표로 주요 정책에 대해 유권자들이

직접 의사표시를 하고 유권자들이 뽑은 대표 등을 임기 이전에 퇴출시키는 국민소환제 등을 행사한다.

장기화된 촛불 축제와 시위에 남녀노소 등 각계각층이 대거 참여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적 실망감을 반영한다. 즉 기존 정치권과 그 시스템에 대한 절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수십년간 실시된 대의민주주의를 통해 누적된 총체적 모순에 대한 시민사회의 시정 요구가 촛불축제와 시위로 폭발하고 있다. 이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하락이 야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이를 반증한다.

지난 십여 년 동안 선거 때마다 투표율이 저조했던 것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의 외면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기존 정치권은 대의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소홀했다. 선량들은 정략적 이해관계가 최상의 가치였을 뿐 국민의 권익은 외면했다.

촛불 축제와 시위에 대해 청와대와 여권에서 괴담, 친북, 반미와 같은 구시대적 사고방식으로 막말을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가 보이는 최악의 부정적인 사례다.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반감을 더 증폭시키는 것은 수구 보수세력의 폭력성이다. 그들은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비판한 언론사에 대해 가스통을 앞세워 위협하거나 촛불 막기 집회를 벌인다. 우리의 잘못된 대의민주주의는 자기 견해처럼 남의 견해도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전통을 수립치 못했다.

국민들은 IMF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 추진 속에 양극화 심화, 고용불안 등의 고통을 받다가 한미 FTA를 위해 건강권이 짓밟히게 되자 분노한 것이다. 자본의 이익을 위해, 미국에 굴욕외교를 하는 대의민주주의에 항거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 행복추구권을 지키려는 절박한 심정이 심야 대규모 시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의민주주의는 대통령,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제가 없다. 촛불시민들이 이명박은 물러나라고 외치는 것은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을 표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대통령, 국회의원 등 선출된 대표는 당선된 뒤 독선, 오만에 빠져 유권자들을 외면하거나 배신하는 일이 흔하다. 선출된 대표들이 자신들의 세비를 올리는 행위는 유권자를 무시하면서 집단이기주의에 빠지는 대표적인 경우다.

촛불 시민들이 수구언론 조종동을 비판, 규탄하고 공영방송 살리기를 외치는 것도 전자직접민주주의와 무관치 않다. 조종동은 촛불 시민들이 부적절한 대의민주주의의 담당주체인 이명박 정부를 적극 지원하는 '관제언론'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언론이 쇠고기 재협상 요구를 헐뜯고 왜곡하는 보도 논평에 대해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언론의 공공성을 짓밟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역기능을 크게 할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촛불'은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



전자직접민주주의가 인터넷 등 첨단 정보전달 기능을 가진 미디어의 대중화로 가능해졌지만, 전통적인 대중매체는 여전히 아날로그적 보도 체질을 고집하고 있다. 신속, 정확한 정보전달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 수만, 또는 수십만명이 참가해 수도의 도심에서 벌이는 촛불 축제와 시

위를 인터넷 미디어들은 생중계를 하고 있다. 밤샘 시위도 시시각각 보도한다. 그러나 기존 대중매체는 그렇지 않다. TV는 대규모 축제나 시위가 진행중이지만 여전히 정규방송만을 내보낸다.

대의민주주의에 체질이 굳어 있는 대중미디어는 디지털시대의 현장을 전달치 못하는 한계를 연일 드러내고 있다. 지배층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기존 매체의 현장 중계는 스포츠나 공식 행사에 국한하는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는 1980년 광주항쟁 당시 시민군과 계엄군이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엄청난 상황에서 방송사가 일상적인 정규 프로만을 방송해 시민들의 분노를 촉발했던 사례를 연상시킨다. 대부분의 기존 매체는 촛불을 보도해도 사건, 사고 중심의 시각을 못벗어나지 못한다. 일부 대중매체가 인터넷 생중계를 시도하고 있으나 전통적인 대중 매체가 아날로그적 보도체질을 개선치 못할 경우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

촛불은 고비용 저효율인 현행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집단적 항거다. 촛불은 정보화 시

대 속의 일반 대중과 집권층의 눈 높이가 초래한 디지털 시대의 사회적 갈등이다. 유권자들의 의식과 생활이 디지털 시대의 그것으로 크게 변했지만, 집권층은 권위주의 시대의 아날로그식 방법론을 고집 하면서 등장한 자연발생적인 사회현상이다. 전세계에서 최초, 최대 규모로 전자직접민주주의를 향한 시민운동이 한국에서 거대한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이대통령은 쇠고기 졸속, 굴욕 협상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서게 만들었다. 촛불 축제와 시위의 배후는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명박 정부는 아날로그형 정치 마인드와 체질을 바꾸지 않는 한 이 위기를 벗어나기 어렵다. 지금은 재협상 밖에 해법이 없다.

전자직접민주주의는 과거 직접민주주의가 좁은 지역, 소수의 참가만 가능했던 한계를 극복케 해 좀더 광 범위하고 직접적인 정치적 토론과 결정을 가능케했다. 그에 따라 정치,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즉 젊은 층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면서 정치적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가 시민들이 동의하는, 여론을 존중하는 정책을 펴도록 만들 것이다. 우리는 지금 매일 진화하는 전자직접민주주의의 현장에 있다.

\* 이 글은 <미디어 오늘>(http://www.mediatoday.co.kr)에 실린 글입니다.

\* 본문 사진 출처는 <미디어 오늘>입니다.

## ‘특보 사장단’

최민희 | 전 방송위 부위원장

‘특보사장단’이라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방송 장악을 위한 ‘이명박식 낙하산부대’를 이르는 말이다. 특보사장단에 거론되는 사람은 <와이티엔>(YTN) 구본홍씨, <아리랑 국제방송> 정국록씨, <스카이라이프> 이몽룡씨, 한국언론재단 최규철씨 등이다. 거론되는 전원이 ‘이명박 캠프의 방송 혹은 언론특보’였다. 이미 특보 출신 양휘부씨는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으로 임명되었다. 한국방송 사장으로 거론되는 김인규씨 역시 이명박 캠프 출신이다. 심지어 <교육방송> 사장으로는 지난 선거 때 공천에서 탈락한 한나라당 이재웅 전 의원이 후보로 오르내리고 있다 하니 한마디로 ‘촛불’이 웃을 일이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독재자들은 노골적으로 방송을 장악하고 당근으로 길들였다. “땡전뉴스”는 길들여진 방송의 수치스러운 얼굴이었다. 그러나 6월 항쟁 이후 전개된 방송 민주화 투쟁의 결과 권력과 방송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변화했고, 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상식으로 자리잡았다. 통합방송법이 옛 방송위원회를 무소속 독립기관화한 것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다는 선언이나 다름이 없었다.

국민의 정부 시절 문화방송 사장 인선 과정에서 권력이 민다고 의심되는 후보 대신 신망받던 언론계 인사가 선출된 것이나, 참여정부 초기 대선 캠프 언론고문 출신이 한국방송 사장에 임명되었다가 낙마한 것 등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2003년 참여정부가 캠프 언론고문을 한국방송 사장으로 임명했을 때 한나라당과 보수언론들은 한목소리로 “공영방송을 권력의 도구로 활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요지로 비판했다. 지금 여당이 된 한나라당 인사들은 말을 바꾸어 “캠프 출신이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선출 과정의 정당성 문제를 지적했던 것”이라고 말한다.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 속에 진행되고 있는 와이티엔 밀실 사장선임에 대해 한나라당은 또 어떤 궤변을 늘어놓을 것인가.

참여정부 시절 ‘공영방송의 코드인사’ 운운하며 각을 세웠던 보수언론들은 입에 재갈을 문 모양이다. 지난 10년 동안 작은 인사 실패도 침소봉대해 코드인사라 비난했던 보수언론이 ‘특보사장단’을 낙하산 부대로 투하해도 눈감아주는 것을 국민은 주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11일 “어젯밤 열린 6·10 민주항쟁 집회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며 스스로 ‘민주화 1세대’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혹시 “이 지경이 된 것은 한국방송과 문화방송 탓이다. 빨리 방송사를 장악해야 촛불 소나기를 피할 수 있다”는 식의 생각을 한 것은 아닐까. 지난 12일 나온 검찰의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 ‘표적 소환’ 예고는 또다시 ‘대통령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방송 민주화는 우리 사회 민주화의 한 상징이다. 방송을 포함한 언론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생명으로 한다. 국민 편에서 권력을 비판하며 민주주의를 지킬 때 방송과 언론은 존재할 가치가 있다. ‘나도 민주화 1세대’라는 이 대통령 말이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이 대통령은 당장 방송을 ‘특보체제’로 바꿔 장악하려는 시도를 멈추어야 한다. 비정상적 특감으로 방송법이 정한 임기를 무시한 채 내부 구성원의 비리를 낚아채 한국방송 사장을 압박하려는 ‘간계’를 거두어들여야 한다. 검찰의 ‘표적 소환’도 중단해야 한다.

방송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이미 누리꾼들이 한국방송 앞에서 촛불을 밝히기 시작했다. 만일 이 정부와 한나라당이 구시대적 방송 장악행태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 모두 기꺼이 방송 장악 저지를 위한 촛불을 들 것이다. 이 정부 출범 100여일, 국민들은 40여일 동안 매일밤 촛불을 들어야 했다. 언제까지 국민들은 이명박을 뽑았다는 ‘원죄’로 고달파해야 하는가.

\* 이 글은 <한겨레신문> 6월 18일자에 실린 칼럼입니다.

\* 본문 사진 출처는 <미디어 오늘>입니다.

## 촛불문화제, 지역지상파 방송의 생존기회

양문석 | 언론연대 사무총장

촛불로 인해 드러난 혁명적인 변화 중 하나는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이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을 제외하고 촛불에서 환영받는, 아니 발언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국회의원은 없다. 종노릇 자처하며 선거에 나오지만, 당선되면 상전노릇 당연하다는 듯 갑죽거리며 국민들을 무시하는 국회의원들의 가치가 똥값이 됐다.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미신'이 촛불에 타 버린 것이다. 대의민주주의만이 유일 가능한 민주주의 방식인양 선동해 온 정치권의 '마타도어'가 지금은 촛불에 타 버린 숯덩이처럼 '존재'의 흔적은 있으나 '기능'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심을 받게 된 것이다.

오로지 기존 매체인 방송과 신문만이 그들 정치권의 동향을 전할 뿐이다. 새로운 것은 없고 대안도 없는 그들의 지루한 정쟁만 있을 뿐인데,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기존매체들은 이를 무슨 뉴스라고 중계방송하고 있다. 특히 지상파를 보면, 예전보다 지금이 훨씬 낫다는 평가를 내리더라도, '배부른 돼지새끼들'의 향연과 추억만들기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기존매체 구성원들의 아주 일부와 더불어 자발적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1인 미디어 시대는 직접민주주의의 시대를 선언한 것이요, 새로운 시대의 다양한 가능성을 예고한 것이다. 직접민주주의는 중앙집권적 정치와 통치를,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속도로 약화시킬 것이다. 중앙 정치는 풀뿌리 정치에 기반을 두지 않고서는 형성되기 어려울 것이며, 통치는 자치로 전환될 것이다.

여기서 지역지상파방송의 역할을 찾아내야 한다. 이번 촛불집회가 지역에서는 어떤 규모로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었는지 나는 모른다. 지역방송이 촛불집회를 어떻게 보도했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반영하거나 대응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안 봐도 비디오'라는 말이 있다. 색다른 대응방식이 있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있었다면 서울까지 알려졌을 테니까. 아니 인터넷에서 칭찬릴레이가 쏟아졌을 테니까. 한데 지역에서 새로운 시도 새로운 대응이 없었기에 인터넷에서 반응이 없었겠지. 과묵한 필자의 문제는 아닐 터.

지역방송의 홈페이지도 있을 터이고, 디지털카메라도 있을 터인데. 지역 곳곳에서 아주 적은 수의 촛불이었지만 타 올랐을 터인데, 그 촛불이 지역방송 구성원들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얼마나 전달되었을까. 1인 미디어가 촛불을 지켰고, 소규모 인터넷 동호회가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아고라와 뉴스블로거 등 각종 토론방이나 뉴스방에 올리는 동안, 지역방송 구성원들은 1분30초짜리 촛불집회 한 두 꼭지 제작·방송하는 것으로 직접민주주의의 시대를 반영했을 터.

기자과 카메라기자가 찍은 영상물이 반드시 지상파를 통해서 전달되라는 법은 없다. 9시 뉴스 끝 무렵에 10분짜리 지역뉴스를 내 보내는 것으로 그 동안 국민들이 지상파에 실어주었던 각종 지원과 기대에 보은할 수 없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촛불문화제 등 지역 거주민들의 일상의 삶, 분노와 기쁨을 실시간 중계를 할 수도 있고, 실시간 중계가 어렵다면, 지금 서울에서 펼쳐지는 인터넷신문사들처럼 파일이나 테이프를 오토바이로 실어 날라, 20~30분의 시차를 둔 중계방송도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고민조차 하지 않는 지역방송, 서울 지상파는 안 해도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다. 하지만 지역지상파는 서울지상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존재의 위기를 겪고 있고, 이번 촛불문화제처럼 지역 주민들과 제대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다면, 이후 이 보다 나은 기회는 당분간 찾기 어려운 현실인데.

적어도 지금까지의 지역지상파방송의 행태를 보면, 결코 지역주민들이 지역지상파방송의 존재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서 줄 가능성은 적다. 그래서 각종 정책관련 토론회나 집회에서 지역방송의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대는 '지역방송의 역할'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동의할까 의심스러운 것이다. 지역민들은 '지역방송의 역할'을 거의 실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조사에서 지역방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30%가량의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답변을 했다. 지역방송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이름을 말해달라는 질문에 3%만이 답을 했다.

지역방송의 현 주소는 바로 이 3%이다. 지역민 3%만이 지역방송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결코 지역방송이 무슨 이유를 대더라도 '지역방송의 역할' 운운하며 존재해야 할 명분으로 주장할 수 없는 처지다.

한국방송광고공사가 해체위기에 섰고, 지역방송을 위한 공적 지원의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 3년 연속 적자면 해고가 가능한 대법원 판례로부터 현재의 지역지상파는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지역경제가 지역방송이 존재할 수 있도록 활성화되지도 않았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수도권 집중화가 촛불집회 무마용 대책, 즉 규제완화의 포장지를 둘러쓰고 이명박정권에 의해서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방송은 그 의미조차 읽을 낼 수 있는 능력마저 상실한 상황이다. 지역민의 눈으로 청와대와 정부의 정책을 읽을 수 있는 노력도 의지도 없는 집단이다. 적어도 지금까지.

강조하고 또 강조하건데, 지역주민들에게 의미 있는 방송이어야 지역주민들이 지역방송을 지켜 준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지역방송의 역할을 무시하고, 고사시키려는 서울의 정책결정자들을 비판하며 함께 참여하여 지역방송 사수투쟁에 나선다. 지금 지역방송은 그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직접민주주의의 확산은 기회다. 자발적 시민참여가 이명박정부의 각종 정책, 특히 반공공성 정책에 집중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 바로 지금의 촛불문화제요, 그 하나의 증거가 KBS를 둘러싸고 있는 촛불들이다.

틀림없는 지역방송의 기회다. 지역방송 홈페이지는 지역인터넷소식지로 거듭나야 하며, 그 뉴스 중 몇 개가 지상파를 타야한다. 지상파를 탄 뉴스만 홈페이지에 올라서는 안된다. 촛불문화제를 계기로 지상파를 통한 지역주민과의 접점만 고려하는 단순프레임 즉 아날로그프레임에 갇혀있질 말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민주민들과 결합하며 지상파를 통해서 확산하는, 즉 인터넷매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멀티미디어프레임, 디지털프레임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

새로운 기회에 새로운 고민과 대안이 필요하다. 생존을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촛불문화제부터 지역지상파 홈페이지에 생중계해라. 그리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라. 그 반응을 전국에 알려라...제발...제발...마지막 생존의 기회를 포착하라.

## 파렴치한 'KBS 장악시도' 당장 그만두라

오늘(20일) 동의대학교가 신태섭 교수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징계사유는 △총장 허가없이 KBS 이사직 겸직 △KBS 이사회 참석차 출장시 총장의 허가를 얻지 않은 점 △KBS 이사회 참석차 학부 및 대학원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이다. 신 교수의 KBS 이사 활동만을 문제삼아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통보한 것이다.

신 교수는 지난 2006년부터 KBS 이사로 활동해 왔다. 이를 1년 6개월 동안이나 전혀 문제 삼지 않던 동의대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갑작스럽게 KBS이사 활동을 이유로 신 교수를 징계한 것은 징계사유와 시기를 고려할 때 KBS 장악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음모에 공모한 동의대의 표적 징계라고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신 교수에 의하면 “이사로 임명됐을 때 학교의 사외이사 겸직 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으려 했으나 KBS가 영리목적의 사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하며, 또한 그사이 “1년마다 제출하는 교육 업적 보고서에서 KBS 이사직 수행 내용도 점수로 인정받았는데 이제 와서 이를 문제 삼아 해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한다. 실로 앞뒤도 전혀 맞지 않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후안무치한 작태라 아니할 수 없다.

또 신 교수가 지난 5월 15일 기자들에게 밝힌 바에 의하면, “강창석 동의대 총장이 지난 13일 나를 총장실로 불러 ‘한국방송 이사직을 사퇴하라. 사퇴하지 않으면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감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신 교수가 강 총장의 요구를 거절하자 강 총장은 ‘학교 허락없이 한국방송 이사회에 출석한 점’을 문제 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편 신 교수가 학교 측으로부터 KBS이사 사퇴압력을 받았던 지난 5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KBS 김금수 이사장을 만나 ‘정연주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고, 며칠 지나지 않아 김금수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일이 있었다. 또 일부 친한나라당 성향의 KBS 이사들은 근거도 없는 ‘정연주 사장 사퇴 권고 결의안’을 상정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감사원의 KBS ‘표적감사’, KBS 외주제작사에 대한 세무조사, 검찰의 정연주 사장 소환 등 정부의 KBS 장악시도가 계속 이어졌다.

그동안 신 교수는 ‘정연주 사장 사퇴’ 등 이명박 정부의 ‘KBS 장악시도’에 반대해 왔다. 이에 대한 보복의 일환으로, 정부는 신 교수의 KBS이사 사퇴를 종용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를 동원해 동의대에 압력을 넣고, 동의대는 징계를 무기로 신 교수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해왔다. 신 교수가 그런 부당한 압력에 굴복할 수 없다고 거절하자, 동의대는 결국 오늘 KBS 이사를 그만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 교수에게 보복성 징계조치를 통보한 것이다.

신 교수에 대한 해임통보는 언론장악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명박 정부의 파렴치함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임이 분명하다. 이명박 정부는 ‘방송을 장악하면 여론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하루라도 빨리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 교수 보복징계’와 같은

---

무리수가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최단기간 지지율 폭락'이라는 기록을 달성한 이명박 정부는, 이 사안으로도 또다시 준엄한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는 동의대에게 신 교수에 대한 해임 통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해임 통보는 동의대가 정권의 부당한 · 압력에 굴복해 징계권을 남용하고 교권을 침해한 명백한 '부당 징계'이기 때문이다. 만일 동의대가 끝끝내 징계철회를 거부하고 해임을 강행한다면, 동의대 측도 이명박 정부와 함께 언론탄압을 위해 징계권을 남용한 공동정범으로 준엄한 국민적 심판과 역사적 단죄를 받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끝>

2008년 6월 2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고시강행은 국민을 향한 전쟁선포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끝끝내 국민을 버리고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확정짓고 관보계재를 강행했다. 서명도 없으며 합의문 원본조차 공개할 수 없는 국민기만 ‘추가협상’ 결과를 담은 관보계재를 강행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미국과 한 ‘추가협상’은 ‘협상’도 아닌 ‘논의’였으며, 30개월 이상 미국산쇠고기 수입을 방지한다는 ‘QSA(품질시스템평가)’는 법적 강제성이 없다. 더구나 이는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방식이 아닌 민간자율방식으로, 당초 미 농축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제정된 제도라는 점에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한국 수입업자의 주문이 없는 한 30개월 미만 4개부위(뇌, 눈, 척수, 머리뼈)가 검역 시 발견되면 반송 조치한다’고 합의한 것은 그야말로 말장난에 불과하다. 한국 수입업자가 주문하면 수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실효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광우병 위험물질은 소량(0.001g)으로도 감염됨에도 불구하고, 뼈조각과 척수 잔여조직을 허용하였으며, 우리 국민들이 즐겨먹는 등뼈, 곱창 등은 그대로 수입되게 하였다.

우리는 이 같은 ‘추가협상’ 결과를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자작극으로 규정한다. 자작극이 아니라면 ‘추가협상’ 합의문 원본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추가협상 결과에 대한 그 어떤 국민과의 소통과정 없이 재고시 절차를 어기며 기습적으로 고시를 강행할

.....

수는 없다.

더욱이 경악할 것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주권과 건강권을 미국에 갖다 바치고, 이에 항의하는 국민들을 폭력과 연행으로 짓밟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부터, 초등학생, 취재기자, 아이엄마에 이르기까지 이성을 상실한 채 국민들을 무차별 폭력 연행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폭력적인 탄압과 거짓말로 고시를 강행한 것은 기만적인 추가협상 결과를 자인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국민의 분노를 두려워 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우리는 국민을 배신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이 같은 사태의 모든 책임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있음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무시하고, 끝내 국민을 향한 전쟁선포를 거둬들이지 않는다면 국민적 분노의 저항이 폭발하는 것은 필연이다. 관보가 게재된 오늘, 미국산 쇠고기가 쏟아져 나올 냉동 창고 봉쇄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오늘을 기점으로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시작된다. 우리는 고시철회라는 정당한 요구를 위해 싸우는 모든 단체의 행동을 지지하며, 고시철회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국민의 분노를 진정 두려워한다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고시를 철회하라.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 국민과 토론하고, 이에 근거해 전면재협상을 실시하라.

2008년 6월 26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경기도국회의

## 경찰폭력이 ‘과격시위’를 부추겼다

오늘(29일) 정부가 이른바 ‘과격폭력시위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노동부 장관과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공동으로 연 기자회견에서 발표에 나선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시민들의 촛불집회를 “과격 폭력시위”로 규정하며 최루액 살포를 비롯한 초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가 그동안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추가협상에 최선을 다해 국민이 정부에 요구했던 사항들도 대부분 반영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불법폭력시위”가 국민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법과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의경들의 고충에도 관심을 갖고 보도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린다”고 언론계의 ‘협조’를 요구하기도 했다.



<사진출처 : 참세상>

우리는 정부의 이같은 발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28일 저녁부터 29일 새벽까지 촛불집회 현장은 계엄상황을 방불케 했다.

경찰은 작정을 한 듯 비무장한 시민들을 곤봉으로 때리고, 방패로 찌고 군화발로 짓밟았다. 또 돌덩이와 쇠못치, 톱과 소화기 등을 시민들에게 던지는 야만적인 강경진압으로 시민들을 자극했다. 이 과정에서 수 백명의 시민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는데, 우리 단체

의 여성 회원 한 명도 머리를 찍혀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대학 신입생인 그는 물건을 던지는 전경에게 항의하던 중 느닷없이 인도를 덮친 전경이 휘두른 방패에 머리를 찍혀 실신했다. 이 회원은 이마에 길이 5cm 정도의 상처가 깊이 패여, 머리 뼈의 골절로 의심되며 앞으로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어떤 물리적인 행동도 하지 않은 여대생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른 경찰들이야 말로 시민들을 ‘과격시위’로 내몬 주범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와 경찰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살하는 폭력 진압을 즉각 중단하라. 폭력 진압으로 성난 민심을 다스릴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촛불집회가 소수의 ‘운동권’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촛불집회에 단 한번이라도 참석한 사람이라면 이 말이 얼

---

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인지 알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아직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시민을 '폭도'로 매도해 폭력 진압하고 언론을 통제해 위기를 돌파하려 든다면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언론들에게도 당부한다.

국민에게 전쟁을 선포한 듯 폭력진압을 자행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이명박 정부를 제대로 비판하라. 우리가 볼 때 이명박 정부는 최소한의 현실 판단 능력도 상실했다. 그러면서 오직 구시대적인 탄압과 '경제를 살리자'는 약효 떨어진 선동으로 국민의 마음을 잡아보겠다고 나섰다. 이런 이명박 정부의 오판과 공안정국 시도를 막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의 후퇴와 경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정부에 의해 억압적으로 통치되는 사회가 어떻게 희망과 활력을 갖고 발전할 수 있겠는가?

모든 양심적인 언론들이 진실 보도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함께 나서주기를 당부한다. <끝>

2008년 6월 2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 ▶ 상반기 회원의 날 - 여주 남한강 기행

지난 4월 12일(토) 회원의날 행사로 여주환경운동연합에서 주최, 주관하는 운하길 탐사를 했습니다.

여주시내에 위치한 여주대교로 부터 시작하여 천년고찰 신륵사, 바위늘 구비 등을 돌아보며 운하로 말미암아 파괴될 환경과 생태 교란, 그리고 물에 잠길 위험에 초한 신륵사 유적지등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주현 공동대표와 민진영 사무국장 그리고 이선영 회원, 최은아 운영위원과 식구들3, 홍숙영 운영위원과 식구1, 장윤자 회원과 식구1, 인천일보 유길용 기자 등 총 12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조출한 회원의 날 모임이었지만, 운하 사업의 무모함과 몰상식함을 깊이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 안산지역 지역언론 기사 모니터링단 교육

지난 4월 30일 안산투명사회협의회 주최로 '안산지역언론 기사 모니터링단 교육 및 발대식이 안산 '와 스타디움내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민진영 사무국장이 진행한 교육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에 건강한 언론이 필요하며 건강한 언론은 지역의 독자가 올바른 시각으로 신문을 구독할 때 가능함을 교육했습니다.



### ▶ 지역언론의 현실, 지역 언론의 폐해- 토론회

지난 5월 2일 오후 4시부터 관훈클럽 세미나실에서 (사)언론인권센터 주최로 지역언론의 현실, 지역언론의 폐해라는 주제로 제 2차 언론인권포럼이 열렸습니다.

장호순(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교수는 발제에서 지역언론의 어려운 현실은 지역신문의 난립과 신문 시장의 왜곡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이 만들어졌고 이 법을 통해 지역신문이 신뢰도를 회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서울·수원 촛불문화제 참가

지난 5월 24일과 31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미광우병쇠고기수입반대' 시민촛불문화제에 참여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100일만에 이같은 국민적 저항을 받으리라 예상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인수위 시절부터 쇠고기협상까지 이명박 정부가 내놓는 정책과 그 과정을 보면 국민적 저항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난 10년(어떤 이들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함)엄청나게 진전된 시민의식(엄청난 자유와 분산된 권위와 권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무지했던 이명박 정부가 마땅히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 신문 불법 경품 공동신고센터 발족식 기자회견

6월 4일(수) 오전 11시 프레스센터에서 신문고시 폐지 반대 서명결과 발표 및 신문 불법 경품 공동신고센터 발족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전국), 언론인권센터, 한국기자협회, 전국신문판매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전국 10개 지역에 56개의 신문 불법경품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센터는 불법 경품, 무가지 등을 신고하려는 독자들에게 상담과 대리신청, 현장 출동 후 자료 확보 등을 할 계획입니다.



### 정부·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

국민을 무시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를 강행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이 26일 오후 2시 수원 장안구 영화동 소재의 한나라당 경기도당 앞에서 경기시국회의 주최로 열렸습니다.

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과의 소통 없이 고시를 강행하고 이에 반발하는 국민들에게 무차별 폭력과 연행을 일삼는 만행을 비판하고 규탄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 5월 CMS회비출금

강관석 강진철 강희 구대서 국헌 권성자 권혁용 김경호 김기현 김명훈 김미경 김상돈 김상형 김상희 김수진 김세영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옥란 김용주 김용환 김우영 김유성 김유진 김일천 김재범 김종구 김종호 김준혁 김학균 김학주 김해진 김형인 남길현 류명화 민진영 박득진 박소원 박우석 박종아 박 진 박철하 박흥석 박희숙 서정문 서주애 서지현 서현석 송기출 송명희 송원찬 송주현 송준호 신용승 신윤관 양태환 양훈도 엄미자 엄상균 오동준 오세진 오승섭 오제식 유문종 유정희 유재명 유주호 유희준 윤성근 윤수희 윤재훈 윤철수 이가영 이강진 이경옥 이귀선 이달호 이대수 이동근 이명관 이명수 이무섭 이미연 이민식 이삼노 이상무 이상훈 이선경 이선영 이선호 이선희 이순환 이승억 이영이 이은실 이재교 이종대 이주현 이진호 이호현 이흥렬 임이화 임충 장문하 장준호 장진아 정문옥 전상천 정성태 정연훈 정해득 정해진 조상민 조성범 조성찬 조영달 조춘식 조탁준 조혜원 조환구 차규남 최광희 최원정 최은아 최종식 최준영 최춘일 최형식 표신중 한경윤 한동민 한명준 한영호 허행철 홍경표 홍숙영 홍흥식 황우철 황태연

### 6월 CMS회비출금

강관석 강진철 강희 구대서 국헌 권성자 권혁용 김경호 김기중 김명훈 김미경 김배곤 김상돈 김상형 김상희 김수진 김세영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영희 김옥란 김용주 김용환 김우영 김유성 김유진 김일천 김재범 김종구 김종호 김준혁 김태연 김학균 김학주 김해진 김형인 남길현 류명화 류현희 민진영 박득진 박소원 박우석 박종아 박 진 박철하 박흥석 박희숙 변이철 서정문 서주애 서지현 서현석 손대선 송기출 송원찬 송주현 송준호 신용승 신윤관 양은선 양태환 양훈도 엄미자 엄상균 오동준 오세진 오승섭 오제식 유광재 유정희 유재명 유주호 유희준 윤성근 윤수희 윤은상 윤재훈 안병주 엄민용 이가영 이강진 이경옥 이귀선 이달호 이대수 이동근 이명관 이명수 이무섭 이미연 이민식 이삼노 이상무 이상훈 이선경 이선영 이선호 이순환 이영이 이은실 이재교 이종대 이주현 이진호 이철원 이호현 이흥렬 임이화 임충 장문하 장준호 장진아 정문옥 전상천 정성태 정연훈 정해득 정해진 조상민 조성범 조성찬 조영달 조춘식 조탁준 조혜원 조환구 차규남 최광희 최민경 최원정 최은아 최종식 최준영 최춘일 최형식 표신중 하태균 한경윤 한동민 한명준 한영호 허행철 홍경표 홍숙영 홍흥식 황태연

※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누락된 분은 사무처로 연락바랍니다.



## 감사드립니다.

경기민언련 장문하 상임대표님의 칠순을 축하드리는 의미로 많은 분들의 후원을 통해 지난 6월 17일-21일(4박 5일) 두만강기술전문학교 방문과 백두산을 방문하고 오셨습니다.

후원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추후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늦게나마 언론운동에 헌신하신 장대표님을 모시고 칠순을 축하하는 식사자리를 준비하고자 하오니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후원자명단>

박우석 박종아 박희영 서정문 오제식 이가영 최민경 이종대 윤수희 경인일보사장 이주현 권혁용 최은아 최준영 이달호 홍숙영 김해진 청산 경인일보 언론노조 신윤관 이은실 조탁준 민진영 김삼석 이상무 이홍렬 이호헌 오승섭 송원찬 이기원 OBS노조

<모금총액> 198만원

<지출> 여행경비 105만원

<남은 잔액은 칠순선물 및 축하잔치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 [ 장문하 상임대표 칠순 축하잔치 ]

- » 언제 : 2008년 6월 18일(금) 오후 7시
- » 어디서 : 청산 (경기민언련 1층)
- » 문의 : 244-7632 / 019-207-2944

◆ 화환과 축의금은 절대 사절합니다. 몸만 오세요. ◆